

인공지능·스마트 양식기술 도입… 전남 수산업 도약

도, 관리시스템 등 5대 역점 분야 전환점 마련 자동화 장비 보급 등 78개 사업 1849억 투입

전남도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인공지능(AI)·스마트 양식기술 도입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849억원을 들여 스마트 양식장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5대 분야 78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수산업의 구조 혁신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AI·스마트 양식업 육성, 생산체계 개편을 통한 수산업 구조

개선, 어업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체계 전환, 어촌 기본소득 보전과 경영안정 지원, 수산자원 생태 회복과 생산기반 확충 등 5대 역점 분야를 중심으로 해양수산 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할 방침이다.

새 정부의 AI·스마트 산업 정책에 발맞춰 스마트 종자 생산시설과 글로벌 참

조기 양식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양식

현장에 자동화 장비와 전복 디지털 선별기 등을 보급하기 위해 213억원을 투입한다.

해양수산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선 358억원을 들여 벤자리 등 이상수온에 강한 양식품종 전환을 유도하고, 양식장 소산공급기 등 재해 대응 장비를 보급해 어업 피해 예방을 강화한다.

또 전남 대표 양식품종인 전복의 과잉생산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복 산업 대전환' 원년으로 삼아 전복 가두리 감축과 가공제품 생산 지원 등에 50억원을 투자한다.

연근해 어업의 합리적 생산 관리를 위해

80억원을 들여 연근해 어선 집중 감척을 추진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참여 어업 인에 대한 규제 완화 건의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예측이 어려운 수산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사전 예방형 안전 관리 사업도 추진한다. 전남도는 83억원을 들여 노후어선 기관 대체와 장비 개량, 구명·소방·항해 장비 등 필수 안전장비 보급, 소형선박 화재감지기 시스템 지원 등을 통해 고위험 어선을 집중 관리하고 사고 예방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과 연계해 488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도서지역 거주 어업인과 소규모 경영 어업인, 어선원의 기본소득을 보전한다. 어선·어선원·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과 항·포구 맞춤형 인양기, 부진교 설치 등을 통해 안정적 어업 활동 여건도 조성한다.

수산자원 생태 회복과 친환경 수산물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577억원을 들여 해역별 특화 수산종자 매입·방류, 물고기집(인공어조) 설치, 바다숲 조성, 양식수산물 인증비와 친환경 에너지 장비 보급 등을 지원하고, 블루카본 기반 조성에도 힘

을 쏟는다. 전남도는 지난해 해양수산부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돼 전남이 스마트 수산업 전환을 이끄는 핵심 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선도지구 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총 1900억원이 투입된다.

전장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5대 분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전남 수산업의 구조혁신을 이끌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경쟁력 있는 어촌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정진욱 발의 '반도체산업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상임위 심사·본회의 의사진행발언·통과까지 증추 역할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사진)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법안은 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2036년까지 한시적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단년도 예산이 아닌 중장기 재정 기반을 통해 △대규모 인프라 구축 △소부장 기업 육성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R&D)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당시 본회의 발언자로 나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인프라와 인재·임지 등 지역이 처한 제약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비수도권도 경쟁력을 있는 반도체 생태계를 갖출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라 향후 정부는 5년 단위의 반도체 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예산·입지·기술·인력 정책을 일원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반도체산업의 집적지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망·용수·도로망 등 핵심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설치·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클러스터 지정 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기회발전특구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연구개발특구와의 중복 지정을 허용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전남해양수산과학원-서울대

기후위기 대응 해양수산 연구 '맞손'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원장 김종남)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학부장 박복진)는 29일 서울대학교에서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연구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

협약은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해양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남도의 풍부한 해양수산 현장 데이터와 서울대의 세계적인 연구 역량을 결합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 세계적 이상기후에 따른 해수면 온도 상승과 고수온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양식생물의 폐사 발생 등 어업 현장의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해양환경 변화는 어획되는 수산자원의 이동(회유) 경로와 기존 정착 서식지 환경변화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기존 연구 체계 개선과 데이터 기반 해양수산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연구기관과 학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실질적 대응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과 서울대학교는 기후위기를 공감하며 △기후변화 대응 연구 고도화 △공동 연구개발(R&D) 및 기술 자문 △인적·물적 인프라 교류 △융합형 인재 양성 등 4개 분야에서 상호 협력 대응키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 연구 고도화 분야에서는 고수온에 강한 양식 품종 개발, 블루카본 등 탄소 흡수원 관련 양식 종 다양화 연구, 수산자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 자문 분야에서는 해양수산 분야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과제를 발굴한다.

인적·물적 인프라 교류 분야에서는 현장 실무 인력과 학계 연구진 간 기술 자문과 협력을 강화하고, 융합형 전문 인재 양성 분야에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해양수산 전문인력 육성에 역량을 맞대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해양수산 분야 핵심 기술 확보는 물론 대형 국책 과제 수주를 위한 대외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장 복합적인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어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연구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김종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고수온 등 급변하는 해양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최고 학술기관인 서울대학교와 협력하게 됐다"며 "전남의 생생한 현장 경험과 서울대의 연구 역량을 결합해 어업인의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전남 해양수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디"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고문의 062)370-7070
구독문의 062)370-7080

뉴스는 진실이어야 합니다!

거짓 없는 보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광남일보를 구독해 주세요

